



프랑스 등
유럽의 저항
2~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녹색당은
유대인혐오 비방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4면

조희대가 국감에서
기세등등한 까닭
9면

여권의
검찰개혁
내용
10면

인도
바퀴벌레 투쟁
재개
11면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시위 소식
12면

《기독교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서평
5~8면

프랑스가 타오른다 유럽이 들끓는다

학생·노동자 투쟁으로



참담한 교육·사회 환경: 프랑스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뉴스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 프랑스의 참담한 교육 환경을 두고 선진국 프랑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탄식이 나온다. 특히 노동계급 거주지, 그중에서도 흑인·아랍계 등 유색인종이 밀집해 있는 노동계급 거주지의 교육 여건은 끔찍하다. 교육 문제가 계급·인종차별·빈곤 문제와 완전히 겹쳐 있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와 수년째 이어지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 그 바탕에 있다.

프랑스 재정 적자는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올해 프랑스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4퍼센트다. 유럽연합(EU) 기준인 3퍼센트를 크게 웃돈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GDP의 119퍼센트까지 늘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5퍼센트에 육박했다.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마크롱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며 긴축 예산을 발표했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뇌는 54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연금생활자, 빈곤층이 직격탄을 맞는 긴축안이다.

은행가 등 자본가들은 공공 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라고 마크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 볼 때 프랑스는 '유럽의 새로운 병자'다.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대형 은행, 헤지펀드 등)은 특정 국가 채권의 투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대량으로 내다판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국채 금리는 폭등한다.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부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강경한 긴축 정책을 집행한다.

문제는 프랑스만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부 유럽 국가들 — 이른바 '피그스'(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 이 재정 위기를 겪었던 2010년대 전반부와 달리, 지금은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부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해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5.35퍼센트까지



“그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는 교문을 봉쇄한다” 고등학생들의 긴축 반대 배너

올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은 5.45퍼센트, 독일은 3.47퍼센트다. 국채 금리가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던 때는 2009년이었다.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부채 위기가 절정에 달하며 세계경제를 타격했던 때다. 17년 만에 국가부채라는 유령이 다시 위협적으로 돌아온 것이다.

공공 부채 증가에 더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금리 인상 압력을 넣고 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임명한 케빈 위시가 이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중순 기준금리를 수년 만에 처음으로 0.2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다른 금리도 뒤따라 오른다.

AI 기업들의 대규모 차입이 격화시킨 자금 확보 경쟁도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다.

부채 탕감

프랑스 좌파 정당 ‘불복종 프랑스’(LFI)의 지도자이자 대선 후보인 장뤽 멜랑송은 국가부채 일부를 “없애 버리자”고 주장했다. “우리가 할 일은 프랑스은행이 쥐고 있는 18퍼센트를 불에 던져 넣는 것이다.” 이는 약 6,000억

유로 규모다.

멜랑송이 모라토리엄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이 양적 완화 과정에서 매입해 보유한 프랑스 국채를 소각해 부채 규모와 이자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정부의 지출 여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군사비 지출 규모에서 보듯 돈은 있다. 멜랑송의 부채 (부분) 탕감 요구는 공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 지배자들은 이 제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의 대선 후보 마린 르펜도 반대한다.

프랑스 지배자들이 멜랑송의 제안을 반대하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 멜랑송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중도우파인 에두아르 필리프를 앞서고 있다.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마린 르펜과 맞붙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부채 탕감은 지배계급에게 금기다.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뇌는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절도라고 부른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는 노동계급이 생산한 부를 빼앗고 자본가의 이윤을 늘려 주는 수단일 뿐이다. 프랑스가 국가부채 이자로 내는 돈

(약 745억 유로)이 연간 교육 예산(약 640억 유로)보다 많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좌파 후보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 지출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미리부터 한계를 부과하고자 한다.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 요구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벗어난다는 논리다.

단, 러시아 때문에 유럽 지배계급에게 지금 군사비 지출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성역이다. 프랑스 국방비는 삭감되기는커녕 오히려 증액돼 왔다. 2025년 505억 유로에서 2026년 570억 유로로 늘었고, 2027년에는 634억 유로에 달할 예정이다.

부채 위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방어하려면 좌파는 지배자들의 반대와 협박, 거둬드는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순응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540억 유로에 달하는 긴축안과 부자 감세, 핵심 공공 서비스가 아닌 군대로 향하는 돈을 포함한 프랑스 정부 예산안을 폐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예산안 투쟁에서 승리하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뇌 총리도 몰아낼 수 있다.

국제적 맥락

현재 프랑스 투쟁을 촉발한 재정 적자의 책임을 보통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긴축 정책 강요 요인들은 세계의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 저항의 배경이 국제적 맥락과 연결돼 있기에 투쟁이 국경을 넘나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주거와 강제 퇴거를 둘러싼 스페인의 대규모 투쟁, 포르투갈의 주거난 항의 시위와 공공부문 파업, 프랑스에서 영감을 받아 동참하는 벨기에 학생 저항, 독일의 징병제 반대 학생 시위, 인도 바퀴벌레 운동의 귀환 등이 일어나고 있다.(3, 11면을 보시오.)

이런 저항들에는 수년간 끓어오른 기성 사회 질서에 대한 울분과 반감이 깔려 있다. 생계비, 주거, 연금, 연료비 문제뿐 아니라 인종차별과 파시즘, 자지구 인종학살, 환경 비상사태,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 등에 대한 거대

▶ 3면으로 이어짐

프랑스와 함께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들

이원웅

프랑스에서 전개되고 있는 저항은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격의 일부이기도 하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87세의 여성 마리아 카르메이 71년간 살아온 집에서 강제 퇴거당한 것에 대한 항의로 촉발된 투쟁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등 주요 도시의 광장들에는 주거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농성 캠프가 차려졌다. 많은 사람들은 주거난에 항의해 행동에 나섰지만 인종차별, 파시즘, 전쟁에 대한 반대 정서도 광범하다.

10월 4일 스페인의 약 50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마드리드에서는 약 50만 명이 행진을 벌였다.

이 행동은 스페인 사회당 정부가 집

세 동결 등 긴급 주거난 대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직후에 벌어졌다. 그 입법은 의회에서 우파의 반대

에 부딪혔다. 거리의 분노는 대부분 총리 페드로 산체스를 향했다. 이에 대응해 산체스는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스페인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위원회(CCOO)와 노동총연맹(UGT)은 선거운동 기간에 주거난과 임금 문제로 하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두 노총이 전국적 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마드리드에서는 10월 14일부터 교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

거리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투쟁적이고, 조기 총선이 다가오는 동안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하다.

산체스는 우파 때문에 주택난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산체스 정부 또한 운동이 분출하고 일주일

이 지나서야 집세 동결에 나섰다. 보통 사람들이 주거난으로 고통받아 온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는데 말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파인 국민당과 파시스트인 복스의 연정이 들어설 전망이 유력하다. 그런 상황에서 산체스는 '차악'으로 선택받으려 한다.

그러나 복스가 정부에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운동은 오히려 더 대차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당 산체스 정부가 건축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며 지지를 잃는 동안, 스페인 우파 진영에서는 더 오른쪽으로의 재편이 이뤄졌다. 전통적 우파인 국민당은 복스를 견제한다며 더 우경화했고, 이는 오히려 복스의 입지를 강화했다.

현재 복스는 광장 점거 운동을 정면 공격하고 있다. 그 운동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광장을 "청소"하러 자신들의 거리 캠페를 보내려 하고 있다. 복스 주요 인사가 직접 최루 스프

레이로 시위대를 공격하기도 했다. 복스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좌파와 운동을 분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시위대는 파시스트 캠페들을 몰아내고 광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으로 여기에 맞서고 있다.

선거 결과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상징적인 선거운동 제스처에 그치지 않도록 아래로부터 파업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독일에서는 9월 25일 징병제에 맞서 4만 5,000명의 청소년들이 수업 거부

를 벌였다. 10월 2일에는 징병제 반대 문화제에 청소년 2만 명이 참가했다. 10월 3일에는 전통적인 평화 운동의 호소에 따라 베를린에서 최대 2만 명, 슈투트가르트에서 1만 5,000명이 시위를 벌였다. 파시스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대한 반대와 팔레스타인 연대가 시위에서 두드러졌다.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9월 26일에는 17만 5,000명이 복지 삭감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9월 말에는 자동차 공장 폐쇄 위협에 맞서 노동자 17만 5,000명이 또 다른 시위를 벌였다.

벨기에·포르투갈

벨기에에서는 건축 재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대규모 시위·파업과 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저항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10월 6~8일에는 대규모 학생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12일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으로 철도·대중교통·학교·방송·공공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었다.

포르투갈에서는 35만 명 이상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15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전국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이를 시작으로 10~11월에 일련의 쟁의가 예정돼 있다. 프랑스의 '연료비 시위'와 같은 날인 10월 17일에도 집중 집회가 잡혀 있다.

공통점

저항이 분출하는 모든 나라에서 활동가들은 팔레스타인이 불복종과 저항의 상징으로서 갖는 중요성에 관해 언급한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행동들은 다른 쟁점들을 둘러싸고 싸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냈다. 특히, 이탈리아의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들은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조건뿐 아니라 반제국주의를 위해서도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줬다.

10월 30일에는 이스라엘행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프랑스, 그리스, 바스크, 이탈리아, 튀르키예, 모로코 등지의 항만 노동자들의 국제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불평등과 생계난은 국경을 가로질

러 벌어지는 문제이고, 정치와 경제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시위는 학교와 대학, 일터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벌어졌지만, 경찰과 파시스트들, 부자들에 대한 깊은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저항 모두에서 계급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시위에 일부 노동자들(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이 재빨리 가세했다. 스페인의 운동은 2011년의 광장 점거 운동과 달리 노동계급 정체성을 매우 뚜렷하고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스페인에서 가장 자주 외쳐지는 구호의 하나는 "노동계급 투쟁 만세!"다.

▶ 2면에서 이어짐

한 율분이 표출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분노가 언제나 왼쪽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극우와 파시스트는 절망과 원망을 먹고 자란다. 프랑스에서도 개혁주의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저항을 억누른다면, 르펜과 국민

연합이 지지를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거리 투쟁이 더 강력해지고, 노동자들이 더 많이 참가해 완강하고 전투적으로 투쟁한다면 르펜의 소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인식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프랑스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다: 프랑스 저항의 배경, 전개, 전망

발제 드니 고다르 프랑스 인종차별 반대 연대체 '연대의 행진' 조직자, 프랑스 혁명적 좌파단체 '계급독립성' 회원

일시 10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 전문통역사의 한-영 통역 제공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4층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서울 지역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녹색당은 유대인혐오 낙인 찍으려는 비방에 굴복해선 안 된다

영국 녹색당 대표 잭 폴란스키와 그의 당이 제러미 코빈이 당한 것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폴란스키는 이를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영국 권력층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폴란스키는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

이번 공격은 2015~2020년에 노동당을 이끌던 코빈이 당한 공격과 형태가 똑같다. 언론의 광기에 가까운 공세와 당내 우파의 공격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도 똑같고, 공격 대상을 유대인 혐오자로 모는 거짓 비방을 핵심 무기로 삼는 것도 똑같다. (관련 기사: 본지 307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유대인 혐오자라는 거짓 비방이 노리는 것’)

도덕적 정당성 면에서 언론의 공격은 경멸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저열하다. 이번 공격의 선봉에는 다름 아닌 토니 블레어가 있다. 이라크의 학살자였고, 지금은 트럼프의 역만장자 측근인 래리 엘리슨의 돈으로 먹고사는 작자 말이다. 블레어는 녹색당이 감히 시온주의를 인종차별이라고 선언해 “선을 넘었다”고 꾸짖었다. <텔레그래프>는 녹색당을 비난하는 역겨운 만평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을 동시에 모욕해 그 저열함이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한편, 팔레스타인 대의의 믿을 만한 우군이 결코 아닌 캐럴라인 루카스를 필두로 한 녹색당 전 대표들은 폴란스키가 호번앤드세인트팬크러스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기회 삼아 득을 보려 해 왔다. 폴란스키가 녹색당을 역동적인 “생태 포퓰리스트”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못마땅했던 그들은 이제 폴란스키를 끌어내리려 한다.

시온주의 운동이 19세기에 어떻게 시작됐든 간에, 오늘날 시온주의가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인종차별적 아파트 헤이트(인종분리) 국가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런 취지의 결의문을 녹색당 당대회가 통과시킨 것은, 그 명백한 진실을 2023년 10월 7일 이후 3년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거대한 학습 과정(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 역자의 결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녹색당의 성공을 가능케 했다. 우파는 그 고리를 끊으려 한다

폴란스키가 거둔 성과는 그런 학습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거대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벌어지고 노동당 키어 스타머 정부가 생계비 위기 대응에 첫발조차 떼지 못하자 폴란스키는 녹색당에 기회의 문이 열렸음을 감지했다.

폴란스키의 전략은 성공을 거뒀다. 2월 고트앤드덴튼 보궐선거에서 녹색당 후보 해나 스펜서가 압승을 거두고 5월 지방선거에서도 녹색당이 약진한 것이다. 이런 성공은 현 노동당 총리 앤디 버넘이 스타머를 축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버넘은 노동당을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새단장하려 애써 왔고, 그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이다’

그에 따른 노동당 지지율 반등이 폴란스키가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주요 원인이다.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이다’ 결의문 통과를 보궐선거 투표가 너무 임박한 시점에 이뤄져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폴란스키(유대인이다)에게 유대인 혐오자 낙인을 찍는 여러 달에 걸친 비방은 심중팔구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제 폴란스키가 해야 하는 것은 단호하고 굳게 버티는 것이다. 코빈이 몰락한 요인 하나는 코빈 지도부가 타협과 책략으로 공격에 대응하기 일췌였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코빈은 수세에 몰렸고 코빈 지지자들은 사기가 저하됐다.

폴란스키는 시간이 그의 편임을 알아야 한다. 버넘이 실질적 사회 변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지금은 코빈의 노동당 대표 시절에 없던 것이 있다. 영국 사회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하고 지속적이고 갈수록 급진화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다.

바로 이것이 힘의 근원이다. 폴란스키의 최대 약점은 자신의 당이다. 역사적으로 녹색당은 주로 중간계급에 기반을 둔 틈새 선거 정당이었다. 지방의회에서 녹색당의 전력은 주류 정당들보다 그다지 나을 게 없었다.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 녹색당이 거둔 일정 정도의 선거 성과는 그 당들이 썩어빠진 친제국주의 정당으로 변모하는 데에 일조했다. 유럽 각국의 녹색당들이 영국 녹색당의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이다’ 결의문을 비난하는 것을 보라.

지금까지 폴란스키는 월요일자 <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디언> 기고문에서 “불완전하다”고 일컬은 결의문에 관해 요리조리 회피하고 말을 흐려 왔다. 하지만 굴복한 것은 아니다. 그 글에서 폴란스키는 이렇게 썼다.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주와 인종학살을 떠받치는 이 데올로기라는 결의문의 핵심은 나의 견해와 부합한다.”

그럼에도 폴란스키는 녹색당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 운동이야말로 녹색당의 성공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운동에는 사회의 진정한 변혁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혁명적 좌파도 반드시 필요하다.

번역 김준호



팔레스타인 권리 박탈을 정당화하는 서구 성서 해석을 비판하는 급진적 기독교 지식인 미트리 라헵



서평 | 《기독교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시온주의에 속지 않게 도와주는 책

최일봉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

이 책의 저자 미트리 라헵(Mitri Raheb, 1962~)은 팔레스타인인 루터회 목사이자 교육·문화 활동가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곳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아 왔으며, 그곳에 있는 다르 알칼리마대학교의 설립자이자 현재 총장이다. 팔레스타인인이 고향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 그의 주된 활동이다. 다르 알칼리마대학교와 비영리 교육·문화·지역사회 기관들의 연합체를 통해 예술·문화 교육, 청소년 활동,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



기독교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미트리 라헵 지음, 정병준 번역
동연 발행, 2026. 260쪽, 19,000원

그의 이런 활동은 팔레스타인인을 외부의 구호를 기다리는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세우려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처지를 정착민 식민주의와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 속에서 분석하는 급진적인 기독교 지식인이다. 서구 개신교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점령 아래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인의 경험에 비추어 비판해 왔다. 점령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거부하고 세계 교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카이로스 팔레스타인'의 창립 참여자이자 문서 작성자이며, 점령과 폭력에 맞서고 평등과 공존을 추구한 활동을 인정받아 이스라엘 언론인 기드온 레비와 함께 2015년 울로프 팔메상을 받았다.

그의 저술을 관통하는 질문은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서구의 성서 해석과 정치적 상상 속에서 도외시되는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책도 ‘이스라엘’, ‘약속의 땅’, ‘선민’ 같은 개념이 어떻게 현대 국가의 땅 지배와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박탈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는지 분석한다. 특히 미국 복음주의 우파뿐 아니라,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을 이스라엘 국가의 신학적 옹호로 연결한 서구

진보·자유주의 신학까지 비판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카를 바르트, 월터 브루그만, 볼프 렌트르프, 1995년 이전의 위르겐 몰트만 같은 유명하고 존경받는 학자들도 ‘홀로코스트 이후 신학’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홀로코스트 이후 신학’ 비판

미트리 라헵의 《기독교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끝없이 되풀이되는 협상 실패의 역사로 보는 통념을 뒤집는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땅은 빼앗겼고, 주민들은 쫓겨났으며, 식민 지배의 물질적 기반은 커졌다. 책은 이 연속성을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개념으로 옹기 설명한다. 그래서 이 책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무엇을 해체해야 하는지 밝히는 분석과, 누가 어떤 힘으로 그것을 해체할지 제시하는 전략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간극이 책의 한계다.

책의 출발점은 명료하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등한 두 민족이 같은 땅을 두고 다투는 분쟁이 아니다. 유럽에서 생겨난 시온주의 운동이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을 받아 선주

민의 땅에 배타적 국가를 세우고 그 주민을 몰아내 온 과정이다. 양측의 불신과 증오를 똑같이 문제 삼으면 땅을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의 관계가 가려진다.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화해를 위해 서로 양보하라는 요구는 결국 피해자에게 강탈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압력이 된다.

저자는 팔레스타인에서 진행돼 온 식민화 과정을 ‘점령’으로 설명하는 것조차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벨푸어 선언 이래 이어진 토지 수탈과 선주민 배제, 정착촌 확장을 이해하려면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강조점은 1967년 이후의 군사 점령을 넘어, 이스라엘의 국가 건설과 확장을 더 장기적인 식민화 과정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데 있다.

정착민 식민주의는 보통의 식민 지배와 다르다. 보통의 식민 지배는 피지배 주민을 계속 지배하면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반면 정착민은 땅을 영구히 차지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사회를 세우려 한다. 그들에게 선주민은 이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추방, 토지 몰수, 거주지 파괴, 인구의 격리와 분할은 모두 이 목적에 부합한다. 저자가 강조하듯 식민화는 과거에

▶ 6면으로 이어짐

▶ 5면에서 이어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재생산되는 질서다. 이 관점에서 보면 1948년의 나크바와 그 뒤의 정착촌 건설은 하나로 이어진 과정이다.

이 책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저자가 고향 베들레헴을 분석한 서론이다. 책에 실린 집필 당시(아마도 2023년 직전)의 수치를 보면, 베들레헴 주 토지의 86퍼센트가 이스라엘 군대나 정착촌의 배타적 통제 아래 있었다. 팔레스타인 측에 남은 땅은 14퍼센트뿐이었다. 저자는 정착촌이 비옥한 서쪽 산비탈을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을 에워싸고, 주민들이 새 주거지를 짓지 못하게 막는 과정을 추적한다. 식민화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간을 없애는 일이다.

사해 연안에 대한 설명도 눈에 띈다. 이스라엘은 주택 부지를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 수입, 광물 자원, 수자원까지 장악한다. 군사훈련 구역으로 지정된 베들레헴 동쪽 땅 밑에는 지하수가 있다. 장벽과 정착촌, 군사 구역은 선주민을 생산과 생활에 필요한 자원에서 떼어 놓는다. 저자가 팔레스타인의 공간을 구멍 난 치즈에 비유하는 이유다. 이스라엘이 자원과 연결망을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인은 서로 떨어진 구멍 속에 갇힌다. 이런 생생한 묘사 덕분에 이 책은 흔한 억압 고발보다 훨씬 강렬하다.

저자는 지배가 역사와 지명에도 새겨진다고 지적한다. 파괴된 마을의 이름을 지우고 정착촌 이름으로 덮어 쓰면, 그곳에 주민이 살았다는 증거가 흐려진다. 정착민은 본래의 주인으로, 선주민은 뒤늦게 나타난 방해꾼으로 둔갑한다. 그러나 이 비판을 누구의 조상이 더 오래됐는가 하는 경쟁으로 바뀌서는 안 된다. 저자도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인을 고대의 특정 집단과 단순히 동일시하는 주장을 경계한다. 해방의 정당성은 혈통의 순수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금 살아 있는 사

**이 책의 가치는
강탈을 협상의 불일치로,
종속을 미완의 국가 건설로
포장하는 논리와 프레임을
꺼내 내는 데 있다**



베들레헴 토지의 86퍼센트가 이스라엘 군대나 정착촌의 통제 아래에 있다. 분리장벽에 둘러싸인 베들레헴 학교

람들의 거주와 생계, 쫓겨난 사람들의 귀환, 동등한 권리에서 나온다.

시온주의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이 책과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은 뚜렷이 만난다. 영국의 뱌푸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호의가 아니었다. 영국은 중동의 전략적 거점과 교통로를 확보하려 했고, 시온주의 지도자들은 제국에 쓸모 있는 동맹을 자처했다. 팔레스타인 주민 다수는 자기 땅의 장래를 결정할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저자가 강조하는 이 박탈은 국가 건설 뒤에 생긴 일탈이 아니다. 처음부터 식민 사업을 가능케 한 조건이었다.

여기에 노동과 시장의 분리라는 물질적 내용을 보태야 한다. 팔레스타인 마르크스주의자 이갈 글리크슈타인(토니 클리프)은 히스타드루트가 아랍인 고용을 막고 아랍산 상품을 배척하던 경험을 회고한다. 집단농장이나 노동조합이라는 외양은 선주민 배제와 얼마든지 양립했다. 따라서 초기 노동 시온주의는 평화, 후대 우파 시온주의는 폭력이라는 식의 이분법은 틀렸다. 클리프의 증언과 함께 라헬의 분석을 읽으면, 정착민 식민주의의 뿌리가 특정 지도자(가령 네타냐후)의 악의나 최근 극우 세력의 부상보다 훨씬 깊은 사회적 원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란 파페는 1948년 국가 건설의 핵심은 인종 청소였다고 강조한다. 라헬도 대규모 추방, 마을 파괴, 추방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를 하나로 연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주민들이 우연히 떠났다는 설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주민을 내쫓아 만든 인구 구성을 유지하려면 귀환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난민 문제는 과거의 비극을 보상하는 부차적 의제일 수 없다. 귀환권을 부정하는 질서가 유지되는 한, 국가 건설 당시의 강탈은 현재의 지배 관계로 계속된다.

귀환권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은 더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곳의 팔레스타인인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고, 이 모순은 계속 쌓여 왔다. 책은 영토 장악과 인구 통제 사이의 이 긴장을 잘 포착한다. 2026년 8월에는 정착민들의 공격과 함께 팔레스타인 가옥 포위, 전기·수도 차단, 사유지를 ‘분쟁 토지’로 재분류하는 조치가 진행됐다. 주민을 공격하는 정착민과 토지의 지위를 바꾸는 국가 기구는 같은 강탈 과정에서 손발을 맞춘다. 가자지구의 파괴도 이런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의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 이 사건들은 라헬이 포착한 체제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책의 맺음말은 이스라엘을 제국의 일부이자 대리 세력으로 규정한다. 서방은 군사 장비와 정치적 보호를 제공하

고, 이스라엘은 서방의 이익에 부응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분석하면서도 아랍 군주국들의 거래, 이란 압박, 전략적 수로, 팔레스타인인의 고립을 짚는다. 이런 대목은 외교적 승인이나 지배자들의 태도 변화만으로는 팔레스타인의 탈식민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라헬은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와 친이스라엘 로비의 압력 가운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끝내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다. 로비가 정치인의 경력과 발언을 옥죈다는 설명은 여러 대목에서 강하게 나온다. 그렇다면 왜 로비의 요구가 국가 정책으로 그토록 효과적으로 관철되는가? 책은 이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착민 국가라는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도 두 나라의 현재 동맹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역사적 친연성이 오늘날 군사 지원과 외교적 비호로 재생산되게 만드는 구체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롭 퍼거슨의 「시온주의 로비, 좌파와 극우」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 로비의 영향력은 미국 지배계급이 이스라엘을 중동 패권의 자산으로 여기는 관계 속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랍 대중의 반란에 흔들릴 수 있는 친미 정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에 쓸모가 있다. 팔레스



사진 출처: Activestills

‘자치정부’로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팔레스타인인 집 강제철거하는 이스라엘



사진 출처: AP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이스라엘을 인정했지만 독립도 주권도 얻지 못했다

타인인 강탈에 의존하는 정착민 사회라는 특성이 서방과의 결속을 떠받치기 때문이다. 로비가 제국주의를 조종한다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뒤집으면 미국 등 서방 지배자들의 책임이 흐려진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등 떠밀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다.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의 확장 전쟁이 친미 아랍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면 전술적 마찰이 생긴다. 그러나 이런 마찰을 후원 관계가 곧 무너지는 징후로 봐서는 안 된다. 라힘이 열거하는 위선과 이중 잣대도 이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서방은 자신이 내건 원칙을 몰라서 잘못 행동하는 것이 아니

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그 원칙을 골라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맞서는 운동도 지배자들을 계몽하려 하기보다 그들이 치를 대가를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책은 이스라엘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몰아 팔레스타인인의 입을 막는 행태도 비판한다. 정당한 비판이다. 동시에, 유대인을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뭉뚱그리거나 유대인의 은밀한 권력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보는 설명은 반제국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책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유대인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관된 반인종 차별은 팔레스타인 해방의 일부다. 국가 체제(이스라엘)와 정치 운동(시온주의)을 비판하는 것과 출신을 이유로 사

람들을 적대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운동의 목표와 동맹도 분명해진다.

오늘로 협정에 대한 책의 비판은 특히 날카롭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스라엘을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독립도 주권도 얻지 못했다. 얻은 것은 극도로 제한된 ‘자치’뿐이었고, 영토와 국경, 정착촌과 난민 같은 핵심 문제는 뒤로 미뤄졌다. 협상은 식민화를 멈추지 못했고, 오히려 식민화에 시간을 벌어들였다. 책은 팔레스타인 당국(‘자치정부’)이 식민 국가의 하청 기구가 됐다고까지 지적한다. 이 올바른 비판은 오늘날이 선의로 출발했으나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좌초했다는 익숙한 설명을 반박한다.

그러나 PLO 지도부가 왜 이런 거래를 받아들였는지는 더 파고들어야 한다. 책은 국제적 고립과 세력 약화를 이유로 들지만, PLO 지도부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반면 필 마플릿의 「팔레스타인의 공포와 저항의 역사」는 팔레스타인 민족 내부의 차이를 드러낸다. 난민이 된 자본가와 빈농·노동자의 처지는 같지 않았다. 파타 지도부는 주변 아랍 국가의 지배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이 통치할 국가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다. 해방 투쟁의 지도부가 제한된 통치 기구의 운영자로 편입될 수 있었던 사회적(계급적) 기반이 거기서 드러난다.

책의 국제 원조 비판도 이와 이어진다. 국제 원조는 주민의 절박한 필요를 덜어 줄 수는 있어도 토지와 물, 이동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좋은 통치’를 가르치고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사업은 팔레스타인인이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전제를 되풀이한다. 치안 기구 지원은 주민보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는 데 쓰인다. 강탈을 계속하는 체제가 만든 빈곤은 구호 사업으로 관리하고, 저항은 치안 문제로 다루는 것이다. 책은 자유주의적 평화 구축이라는 외관 뒤에서 작용하는 이 지배 방식을 폭로한다.

이렇게 보면 ‘자치정부’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국경과 자원, 세입과 이동을 외부 권력이 통제하는 한, 행정을 개선해서는 종속 관계를 끝낼 수 없다. 노동자연대가 미국이 추진하는 무장해제, 기술 관료 통치, 시장 개방을 한데 묶어 비판해 온 이유도 여기 있다. 주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하는 재건은 새로운 종속을 낳기 십상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원조와 자치에 대한 라힘의 문제 제기를 이어받는다.

‘두 국가 방안’

‘두 국가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정착촌 때문에 국경선을 긋기 어려워졌다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알렉스 켈리니코스는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과, 조각난 영토에서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약하고 종속된 상태로 묶어 두려는 것은 일시적인 협상 태도가 아니다. 주민을 쫓아내고 세운 국가는 그 주민의 귀환과 자결을 억압해야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필연적인 문제인 것이다. 소국(小國)이라는 명패를 단다고 이 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저자는 두 국가 방안은 이미 너무 늦었고 한 국가 방안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쓴다. 연방, 국가연합, 스위스식 칸톤 등 여러 제도를 거론하며, 부족한 것은 모델이 아니라 식민 사업을 끝낼 의지라고 강조한다. 제도 설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누구의 의지가 어떤 투쟁으로 실현될지는 책에

▶ 8면으로 이어짐

▶ 7면에서 이어짐

서 분명하지 않다. 국제사회가 두 국가 방안을 고집하니 대안은 시기상조라는 판단도 문제다. 국제사회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운동의 목표인데, 이런 판단은 그 목표를 오히려 뒤로 미룬다.

일관된 탈식민화의 기준은 난민의 귀환과 동등한 시민권, 토지와 자원에 대한 차별적 지배의 폐지다. 이스라엘 안의 팔레스타인인과 점령지 주민, 국외 난민을 서로 다른 문제로 쪼개서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단일한 민주적 국가를 지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연방제든 자치제든 이 기준을 실현하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민족별 구획만 다시 짜고 무력과 경제적 지배를 그대로 두면 종속은 이름만 바뀌 계속된다. 탈식민화는 기존 주민을 거꾸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적 특권과 억압 기구를 끝내는 일이다.

국가 승인과 관련한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명칭과 실제 권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5년 9월 가자지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와중에 나온 외교적 승인에 쓰라림을 토로했다. 2026년 10월 주민들은 지도와 현실을 보라고 요구하며, 되풀이되는 두 국가 약속 대신 실제 압력을 가해 달라고 호소한다. 이 목소리는 국제 여론의 변화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외교적 양보는 운동의 성과로 활용하되, 무기 공급과 경제 협력을 끊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승인에 만족하고 멈추면, 식민화가 계속되는 동안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명분만 주게 된다.

결정적 공백

여기서 책의 결정적 공백이 드러난다. 책은 팔레스타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와 거주지 분할을 비교하고, 법적 평등을 얻어도 경제적 지배는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문제 제기다. 그러나 두 사회에서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남아공의 흑인 노동자는 생산을 떠받치는 핵심 세력이었다. 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노동을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도 상당 부분 배제했고, 전략적 산업에서는 주변으로 밀어냈다. 따라서 둘 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규정만으로 같은 해방 경로를 끌어낼 수는 없다.



사진 출처: Gigi Ibrahim (팔라카)



사진 출처: 이탈리아 기증노동조합(USR)

(위) 2011년 이집트 혁명은 독재자를 타도하며 짧게나마 가자지구 봉쇄를 뚫었다
(아래) 지난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며 항구를 봉쇄한 이탈리아 노동자들

노동자연대의 분석은 바로 이 차이에서 출발한다.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파업과 대중 투쟁은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경제를 마비시키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 이스라엘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복지 투쟁은 저절로 시온주의와의 결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인 배제에서 얻는 상대적 특권이 그들을 정착민 국가에 묶어 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인 개개인의 생각이 영원히 고정돼 있다는 말이 아니다. 식민 지배에 맞설 주된 사회적 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판단이다.

그 힘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과 결합할 중동 노동계급에 있다. 노동자연대는 아랍 지배자들과 아랍 노동자들을 구별한다. 친미 아랍 정권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분노가 자국의 불평등과 억압에 맞선 반란으로 번질까 봐 두려워한다. 반면 노동자들은 생산과 서비스를 멈추고,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지역 질서를 지탱하는 정권들에 도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라함은 국제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이 사회 세력의 특별한 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은 결코 사소한 누락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의 길이 카이로를 지난다는 클리프의 말은 팔레스타인 인더러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뜻

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인의 투쟁은 주변국 대중을 고무하고, 주변국 대중의 투쟁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상호작용을 가로막아 온 것은 주변 정권의 국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민족주의적 지도 노선이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아랍 지배자들의 외교에 맡기면 연대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주체와 멀어진다. 그래서 민족해방과 지역의 사회혁명을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같은 기준을 저항 조직에도 적용해야 한다. 식민 지배에 저항할 권리를 지지하는 것과 특정 지도부의 정치·군사 전략을 지지하는 것은 별개다. 노동자연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면서도 그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의존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장투쟁만으로 압도적 군사력과 서방의 후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은 저항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저항이 더 넓은 대중의 힘과 결합해 승리할 길을 찾으려는 것이다.

국제 연대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함은 BDS(불매·투자철회·제재) 운동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과 다른 피억압 집단의 연대에서 희망을 찾는다. 여기에 생산과 유통을 움직이는 노동자의 힘을 더

해야 한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이 그 가능성을 보여 준다.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와 노동조합의 공동 행동은 연대를 거리에서의 의사 표현에서 물류와 공급망 중단으로 끌어올렸다. 이것이 지배자들이 치를 대가를 실제로 키우는 길이다.

물론 노동계급의 힘만으로 전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잠재력은 조직과 정치적 방향이 있어야 현실이 된다. 2011년 아랍 혁명 이후의 반혁명은 독재자가 물러났다고 해서 국가 기구와 지배계급이 패배한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대중 시위를 일터의 조직과 연결하고, 노동조합 지도부의 소극성을 넘어 행동을 확대하며, 자국 정부의 군사 지원에 반대해야 한다. 라함의 책에 부족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바로 이런 힘을 어떻게 형성하고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라함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수무드, 곧 땅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굳센 저항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선주민을 없애려는 식민 사업 앞에서 살아남아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그 목적을 좌절시킨다. 그러나 떠나지 않은 것과 해방을 쟁취한 것은 다르다. 정착민 식민 사업은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고도 오랫동안 주민을 억압하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서 식민 체제가 필연적으로 무너진다는 결론을 곧바로 끌어낼 수는 없다. 수무드를 승리로 이어 줄 사회 세력을 조직해야 한다.

수무드

《기독교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의 가치는 강탈을 협상의 불일치로, 종속을 미완의 국가 건설로 포장하는 논리와 프레임을 걷어 내는 데 있다. 특히 토지와 자원의 통제, 오슬로 체제와 원조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 통찰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정착민과 선주민의 대립을 제국주의와 계급투쟁의 관계 속에 놓아야 한다.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아랍 노동자들의 혁명적 투쟁, 제국주의 중심부 노동자들의 행동을 결합하는 전망이 필요하다. 라함이 선명하게 드러낸 식민 지배의 메커니즘을 실제로 해체하는 과정은 거기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가 내준 공간에서 대담해진 조희대

10월 6일 국정감사에 나온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가 소환한 증인이 아니라 헌법상 국회 전체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그렇다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다.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6분가량 자신의 대법관 제청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지난해 국감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도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가의 식사비나 와인 구입 등 조희대의 비리 혐의나 특권 의식을 들춰냈어도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쪽은 오히려 조희대였다. 오히려 조희대 이전부터 관행처럼 이뤄지던 특혜들을 지금에서야 문제 삼는 민주당의 군색함이 드러났다.

조희대는 답변 중에 ‘위헌’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썼다. 정부·여당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뜻이었는데, 교묘하게 윤석열의 계엄이 위헌이라는 답변 뒤에 그렇게 말함으로써 양비론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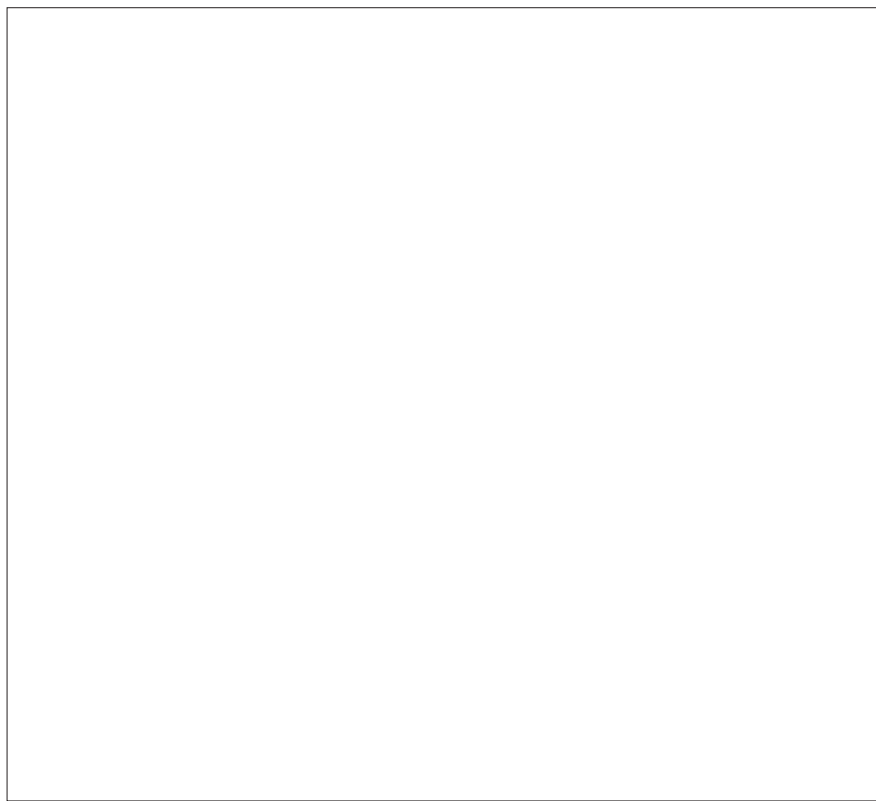
게다가 ‘계엄이 위헌’이라는 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뜻 이상은 아니었다. 이제 와서 자신이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대법원의 계엄 협조 움직임을 보도한 언론 기사들에 정정보도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는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그 회의가 열리던 12월 4일 0시 48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전했다.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위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한 뒤에 나온 대법원의 공식 입장에도 위헌이라는 말은 없었다. 같은 날 아침 출근길에서 조희대 자신은 계엄의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을 뿐이다.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이라고 공개



이재명 정치 위기를 보며 재판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다

규정한 것은 그로부터 이레 뒤의 일로 12월 11일 전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말한 것이다. 1차 탄핵소추안 부결로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당시 여당이던 국힘 의원 일부가 가세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진 때였다.

조희대의 판단이 간접적으로나마 처음 전해진 것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난 뒤인 2025년 5월 2일에 이르러서였다. 이번에도 전대엽의 입을 통해서였는데, 조희대가 지휘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이었다. 해당 판결이 대선 개입이자 방해(결국은 윤석열 세력 돕기)라는 빗발친 반발을 무마하는 맥락이었다. 당시 윤석열은 지귀연과 심우정의 합작으로 풀려나 바깥을 확보하고 있었다.

조희대가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한 것은 계엄 1년이 되는 2025년 12월 3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자리였다.

이날에도 조희대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맥락에서 윤석열의 계엄도 나란히 위헌적인 것으로 비판했을 뿐이었다.

즉, 조희대는 일반적 극우와 달리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사법부 수장이라는 자리를 심분 활용해 이재명과 민주당도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침으로써 극우 일반에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일조해 왔다.

재판 재개

조희대와 민주당 의원들 모두 결코 입 밖에 꺼내지 않은 진정한 쟁점은 극우 장동혁의 입에서 나왔다. 이 공방의 밑바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가 있다.

조희대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전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을 입에 올리기는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중요한 국가기관을 흔드는 것을 꺼리는 소심함과 우파 및 보수적 국가 기구의 협력도 얻어야 통치가 가능하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모두의 대통령”, “국가 정상화”라는 취임 일성이 이를 뜻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쿠데타를 노골적으로 옹호한 이해훈 같은 자들조차 중용하려 한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지지층의 이반을 낳아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그 때문에 지방선거 전후로 여권 내분도 가속됐다. 물론 유시민 등 반명파가 사회 개혁이나 내란 청산에 더 진지한 것도 아니다. 현 정부에서의

영향력과 지위, 차기 대통령직 등을 걸고 벌이는 권력 투쟁일 뿐이다.

극우는 이재명의 정치 위기와 여권 내분을 심분 활용해 기세를 높이고 있다. 미국 극우의 도움도 받아가며 국힘이 주도하는 극우적 공세는 이재명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노무현 탄핵 직전 같다”(김민석)는 말은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지율 하락 속에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히려 극우의 먹잇감이 됐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공소 취소 조항을 빼 달라고 여당에 요청해야 했다. 그런데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욕만 먹고 추진도 못하는 것이다. 여권 내분도 이런 상황에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설사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가 시작돼도 이대로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하강하면 조희대 임기 종료(2027년 6월) 전 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법관 임명 지연을 이유로 윤석열/김건희 재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의 상고심은 선고 하루 전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구속기간은 10월 31일에 끝난다. 조희대는 국감에서 김건희 사건의 선고 시기를 묻는 질의에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연막을 쳤다.

조희대가 이만큼 대담해진 것은 이재명 정부가 오른쪽에 내준 공간 덕분이다.

10월 3일 서울에서는 이재명 하야를 요구하는 극우 연합 집회에 4만 명 이상이 모였다.

의미심장하게도 조희대는 지난달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회에서는 목청을 높이지만, 대중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이재명 정부의 위기가 극우의 득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장호중

이재명도 문제지만

검찰개혁 강경파도 진정한 개혁의 대변자는 아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논란이 컸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낮춰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김진주 씨 등 여성·청소년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민주당 강경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둔감함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고, 그때 비로소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중수청장 후보로 ‘친윤’ 경력의 검사 김지용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인사청문회는 지명 한 달 만에야 잡혔다(10월 14일).

경기도지사 추미애와 민주당 의원 김용민 등은 김지용이 ‘친윤’ 검사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을 겨냥해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국파)”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취임 1년여 만에 대통령과 여당 중진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재명은 “중요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가 기구 개편 과정에서 기구들의 보수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권력 다툼

중수청과 공소청이 초기부터 뼈적거리면 가뜩이나 심화된 정치 위기가 구제불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검사들을 달래면서, 다른 한편 김지용 지명을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도록 놔 두고 있다. 이는 이재명의 보수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단면이다.

본지는 이런 여권 내 첨예한 갈등의 본질이,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여당 내 주도권과 차기 총선 공천과 대선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권

검찰청은 문 닫았지만 여권 내 갈등은 더 커졌다 피억압자·노동계급과 무관한 이 다툼에서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

력 다툼이라고 분석해 왔다. (관련 기사: ‘여권 내홍: 이재명과 반명파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쥐고 산 권력에 충성하며 권력의 손발로서 막강 파워를 휘둘러 왔다. 검찰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불신과 반감은 정당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판정,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손배 청구 인용,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탄압 등 검찰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검사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소리는 정당하다.

문제는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주장이 여러모로 피억압자 및 노동계급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철저히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검수완박’)이 민주주의적 정치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이런 ‘검찰개혁’이 비현실적임은 본지가 일관되게 지적해 온 바다. ‘검수완박론’의 핵심은 직접 수사권 박탈뿐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서 수사과 기소, 재판은 하나의 절차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권한을 나눈다고 해도 각 기관(기능)은 결국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전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의 검사와 경찰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더 근본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검찰권(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형집행 지휘권)은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검찰권은 국가가 독점한 형벌권 행사의 핵심축 기능을 하며 지배계급의 권력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검찰의 억압적 성격과 계급 편향은 부패하고 우익적인 일부 검사 때문이거나 권한이 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

군사 독재의 후예들로 전통 우익 정당인 국힘의 지도적 정치인들에 검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집권하면 검찰을 활용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검사들을 등용해 왔다.

따라서 설사 ‘정치 검찰’을 고쳐서 공정한 심판자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쟁하는 기업들, 지배계급 분파들, 주류 정당들 사이에서의 중립과 공정성을 뜻하는 것일 뿐이지, 계급 사이에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셋째, 경찰도 핵심 억압 기관으로서

횡포와 부패가 끝도 없다. 최근 잇따라 폭로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신고 등)는 경찰의 계급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 권한과 규모를 늘려 준 결과가 뭐였나? 윤석열은 경찰국을 설치해 권한과 규모가 커진 경찰을 수족으로 부렸다. 경찰은 ‘건폭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노조를 전면 탄압했고, 12.3 쿠데타 때 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 나섰다.

수사권이 없다고, 소속이 바뀐다고 해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들의 권력이 약화될까? 반면, 치안을 맡고 있는 무장 조직 경찰이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쥐면서 파워가 더 막강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사이비 개혁

넷째, 검찰개혁은 ‘내란 청산’을 대신할 수 없다. 추미애는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라고 본다. 그러나 윤석열의 쿠데타를 검찰개혁 실패의 결과로 보면, 국가기구 전반의 반민주적 세력 문제를 검찰 문제로 축소하게 된다. 내란 청산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검찰개혁 강경파의 거친 주장을 들으며, 뒤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군장성, 고위 관료, 국정원 간부, 고위 경찰, 판사들이 꽤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여권은 지난 1년간 검찰청 분할 말고는 군·정보기관·경찰·사법부 등에 걸친 쿠데타 가담자와 비호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숙정 과정은 뒷전으로 밀어냈다. 가령 계엄 선포 직후 직원 30퍼센트가 재출근한 국정원은 자체 감사만 벌이고 조직 자체는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 기능(기관)을 쪼개고 나누고 서로 견제케 하는 것으로는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능의 총합으로서 자본주의 국가가 분쇄돼야 하고, 그 전

▶ 11면으로 이어짐

인도 청년들이 ‘바퀴벌레’ 반란을 재개하다

현지 활동가의 목소리

유리 프라사드

뉴델리의 ‘바퀴벌레’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해방파의 학생 조직인 전인도학생연합(AISA)의 주요 간부인 아민 아미토지에 게 재개된 운동의 잠재력에 대해 들었다. 그는 바퀴벌레 운동을 지지하는 무기한 단식에 동참했다.

인도를 뒤흔들었던 청년 운동 ‘바퀴벌레’가 되살아나 다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올여름 대학 입시 비리에 반발해 분출했던 학생 주도 대중 운동 ‘바퀴벌레’는 교육부장관을 끌어내린 바 있다.

몇 주 간의 투쟁으로 이 운동이 극우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입힌 타격은 의회 내 야권이 몇 년 동안 입힌 것보다 더 컸다.

이제 그 운동이 되살아나 모디의 민주주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0월 10일 토요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시위 장소인 잔타르 만타르를 봉쇄하고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

[기사 작성 후, 토요일 뉴델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시위에 나섰다. 연행자만 1만 명이 넘는 정도로 규모가 컸고 탄압도 거셌다. —〈노동자 연대〉편집부]

시위대의 분노는 이른바 ‘선거인 명부 특별 집중 점검’(SIR)에 집중됐다. 이 선거인 명부 정정 작업으로 지금까



인도 극우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

지 1억 3,000만 명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서 지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잃은 것이다. 그중 압도 다수가 무슬림이라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인디언 익스프레스〉신문은, 지난 10개월 간 선거관리위원 3명 중 2명이 선관위원장 가네시 쿠마르에게 SIR에 대해 거듭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바퀴벌레’ 운동의 주요 지도자이자 전(全)인도학생연합 활동가 아민 아미

토지는 이번에 재개된 운동의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전했다.

“SIR를 둘러싼 쟁점들이 광범한 이들이 투쟁에 참여하는 초점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슷한 과정이 2020~2021년 농민 운동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운동은 농민들이 시작하고 이끌었지만 농민들만의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광범한, 온갖 배경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운동의 초점 구실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SIR 절차는 지식인·평가들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사정이 달라진 것은 신문 폭로 뒤부터였습니다.”

아미토지는 되살아난 바퀴벌레 운동에 새로운 세력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으며, 지난번 투쟁에 참가했던 학생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운동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은 모든 사람,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국민회의를 필두로 한 야권 지도자들과 저희 같은 학생 단체들이 교육 문제를 넘어서는 시민적 권리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미토지는 이번 투쟁의 판돈이 더없이 크다고 했다.

“이번 투쟁의 결과는 SIR 절차 전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SIR에 따른 명부 변경 후 치러진 서벵골주(州) 선거에서 모디의 정당 인도인민당(BJP)의 승리, 현 모디 정부를 출범시킨 2024년 로크 사바(하원) 총선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 정권의 존립 근거 자체가 의문시되는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핵심 요구인 선관위원장 가네시 쿠마르의 사임을 평화적 수단으로 관철시킬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출처 Yuri Prasad, 'India's Cockroaches are back for a second bite' (2026. 10. 9) / 번역 김준호

▶ 10면에서 이어짐

에는 아래로부터의 견제를 조금 늘릴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국가기관들 사이의 경쟁과 견제 속에서 비리와 범죄가 폭로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그 기관들을 아우르는 중앙 권력이 위기에 빠지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다.

검찰개혁 선명성 경쟁의 어느 쪽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사이비 개혁에 열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힘을 늘려야 한다.

강압 수사와 자의적 구금을 막고, 누구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배심·참심처럼 재판에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넓혀야 한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절차적 권리와 함께 치료비·생계비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 기구를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민주적·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스스로 투쟁의 근육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성지현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이재명 정부의 위기와 극우의 공세 — 좌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발제 김문성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10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 전문통역사의 영어 통역 제공

장소 서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PLATFORM P2층 다목적실 (홍대입구역 4번, 7번 출구 도보 5분)

참가비 4,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서부 지역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일시 10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바인그룹 빌딩 10층 1004호 (신설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동부 지역모임들 문의 010-5731-7299 / s-east@ws.or.kr

일시 10월 17일(토) 오후 4시

장소 부산 하이텐 스테디룸 4층 psm강의실 (서면역 2번 출구 도보 5분)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부산·울산 지역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가자 학살 3년 국제 공동 행동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다

가자 학살 3년을 맞아 10월 10~11일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요구하며, 자국 정부에 이스라엘 무장 지원과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소 60개국에서 325개 행동이 벌어졌다. 인스타그램과 엑스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10월 10~11일 각국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모습을 담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국제 공동 행동은 지난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전 세계 연대자들은 팔레스타인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학생·노동자 저항, 스페인의 주거권 시위가 크게 분출한 것이 이번 국제 공동 행동에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자국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면서 팔레스타인 것발도 흔드는 모습은 팔레스타인 연대자들이 저항을 통해 연결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영국 런던에서는 25만 명이 행진했다. 학살이 시작된 뒤 37번째 열린 전국 행진이었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을 규탄했다. 참가자 마라씨는 이렇게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는 사람들이 정중하게 부탁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소셜리스트 위커》) 이날 신혼 부부가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행

진 대열 맨 앞에 합류해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치는 모습이 SNS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확산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0일 약 50개 도시에서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로마에서 집회를 조직한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학생운동’의 마야 이사(Maya Issa)는 “이번 행진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안사(ANSA) 통신》)

볼로냐에서는 교육 예산 삭감과 열악한 학교 환경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프랑스처럼 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합류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실이지, 더 많은 폭탄이 아니다”라는 구호도 울려 퍼졌다. 밀라노에서는 약 5,000명이 행진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6,000명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독일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규

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학생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일을 이토록 어려워한다는 것이 정말 끔찍합니다”라며 자국 정부를 규탄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앞에서는 수백 명이 대(對)이스라엘 무기 금수와 제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유대인 에리크 W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을 무장시키는 것이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이름으로 인종학살을 저지르지 말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아나톨루 통신》)

모로코에서는 자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 항의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저녁 베레시드의 주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시위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과 함께 관계 정상화 협정 폐기, 라바트의 이스라엘 연락사무소

폐쇄를 요구했다. 같은 날 저녁 탕헤르에서는 ‘4월 9일 광장’에 모이려던 참가자들을 경찰이 해산시켰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1일 27개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드니에서 수만 명이, 호주 멜버른에서 수천 명이 모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도 10일 수천 명이 도심을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팔레스타인 어린이 2만여 명의 이름이 적힌 20미터 현수막을 들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학생·노동자·페미니스트·의료인 등이 무기 금수와 대이스라엘 제재를 촉구했다.

10월 11일 서울에서도 ‘팔레스타인 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호소한 국제 행동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력 있게 도심을 행진했다. (관련 기사: ‘10·11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 행동: 젊고 다양하고 활기차다’)

이번 10월 10~11일 열린 국제 시위는 각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10월 30일에는 튀르키예,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모로코, 인도 등지의 60여 개 항만에서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반전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한다. 11월에는 유럽 학생과 청년들이 정부들의 군비 증강과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등 군사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10월 11일 서울에서도 국제 공동 행동 집회가 열렸다. 국제주의가 두드러졌다